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9.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0. 6.

다. 상정일자: 2021. 10. 14.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 복지국장

나. 제안이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부 지침 개정에 의해 변경된 재활용 가능품목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안 제13조)

1)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현재 사업장폐기물용 종

량제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조례에 반영

나. 사업장폐기물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1)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미제작 및 미사용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다.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보상금 제도 신설 (안 제42조의2)

1)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 (안 제43조)

1) 종전 조례는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문 내용 보완

마.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품의 품목과 배출요령 개정
(안 별표 2)

바.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및 100리터 봉투 미사용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표 개정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 제1462호, 2020.8.24.)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08. 12. ~ 2021.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부 지침 개정예에 의해 변경된 재활용 가능품목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2017년부터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서울시 공공소각시설 반입이 금지되는 등의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42조의2의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수거지정인제 등을 둬으로써 폐기물 수거관련 편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3조에서는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조례의 준용 규정을 변경하여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일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 안 별표2에서는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 지침개정에 따라 현행화하여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하였고,
- 안 별표3에서는 실제 제작되지 않는 종량제 봉투를 가격표에서 삭제하여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 하였습니다.

○ 자치구 입법현황을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시 구청장에게 신고는 강남구를 포함한 10개구, 수거업자에게 신고는 중구와 중랑구가,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는 강동구를 포함한 8개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보상공은 용산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포장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 차원에서 올바른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